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 배경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제14조에 설립된 단체로, 정부로부터 연간 90억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적단체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이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

□ 질의 및 회신 내용

- (질의1)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소속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호라목의 “공직유관단체”,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제16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위탁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의 임원·단체장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임원(의장,위원장,위원,감사) 겸직 가능 여부

→ (질의1·2에 대한 회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제2호의 공직자,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 등에게 적용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16조제1항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4조 등이 준용됨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제5조 등을 준용하는 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인 것으로 보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축산자조금법 제14조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에 두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축산단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해당 관리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10)

- Q. 사립학교 부부교사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지요?
- A.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생산자단체 임원·단체장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임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자단체 및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로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임원 등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인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본 회신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